

북·중 무역과 대북제재의 한계

정은이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I. 서론
- II. 북·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 III. 북·중 무역의 동인
- IV. 결론

〈요약〉

최근 UN 안보리는 대북제재의 결의안의 범위를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군수물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항목에서 점차 수산물·해외 노동력파견·임가공 등 민생부문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바꿔 말하면 UN은 평화적 해결과 함께 핵과 미사일의 저지를 위한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민생경제 발전과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저인망 그물식 포괄적 제재를 선호한다면 중국은 외과 수술식 정밀 제재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90%이상인 현재 중국을 압박하면 제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 북·중 무역은 '민간무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역이 중국의 동북3성 즉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무역의 역사도 매우 길며 국경선의 길이도 길다. 뿐만 아니라 무역의 주체나 행태를 보아도 국가기관인 무역회사도 존재하지만 그 기원을 살펴보면 북한화교나 중국조선족, 중국에 연고를 둔 북한주민 등 연고자 중심의 보따리무역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북·중 무역은 그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화룡시의 공무원 월급은 무산광산의 광물을 수입하는 천지기업에서 적지 않은 부문이 충당되고 있다. 즉, 지방세수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위안화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북·중 접경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북·중 간 통신·정보망 및 결제망, 도로·유통망 등 인프라망이 공유·형성되어 가고 있다. 즉, 북한에는 통신망을 깔지 않았지만 정보와 전화가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들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중 무역을 증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제재의 한계요인이 될 것이다.

I. 서론

6차에 달하는 핵실험을 계기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연일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재의 범위가 종전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군수물자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항목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와 같이 수산물·해외 노동력파견·임가공 등 민생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 제재의 효율성을 논할 때 ‘북한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UN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2년 일본의 대북제재와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의존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중국의 비중은 2000년 약 25%에서 2010년 이후 90%이상으로 절대적이다. 따라서 미국은 최근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시양이나 단둥은행과 같이 중국기업이나 중국은행을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시장의 환율 및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심지어 내수시장(內需市場)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¹⁾ 그 중에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9%에서 최대 9%까지 성장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북한 당국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실제로 2000년 이후 내부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질적인 지표는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이 북한도 최근에는 저녁에 주민들이 밖에 나와 녹음기를 틀어놓고 노래하고 춤추는 여유로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90년대 암흑기가 지나고 북한에서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삶을 향유하는 계층이 증가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왜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지에 관해 의문을 던지며, 이 의문의 실마리의 하나로 북·중 무역의 구조적 측면에 착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정치적·지리적으로 ‘혈맹(血盟)관계’에 있으면서도 ‘접경’이라는 특수한 입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북·중 접경지대는 민생의 삶의 터전이다.

II. 북·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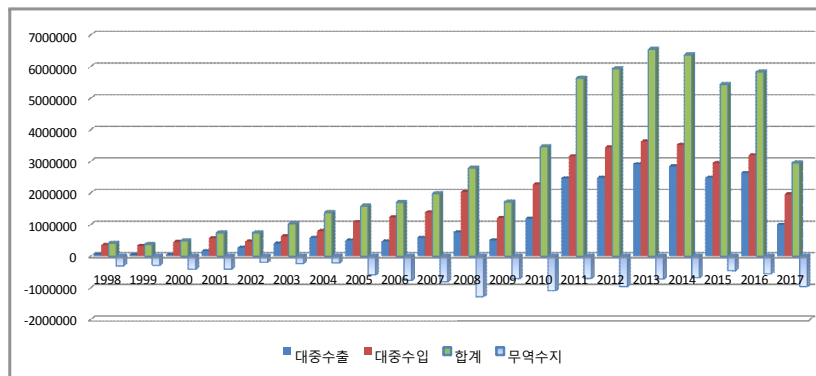
사실 북·중 무역이 부각된 시기는 구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1990년 전후가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이다. 이와 더불어 UN의 대북제재는

1) 2013년 이후 북한의 환율과 물가(쌀가격)은 매우 안정적인 추세이다.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에도 북·중 무역은 〈그림1〉과 같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0.4%에서 2010년 5.24조치이후 70%이상 급상승했다. 이는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2016년 현재 90%로 절대적인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중수출도 2013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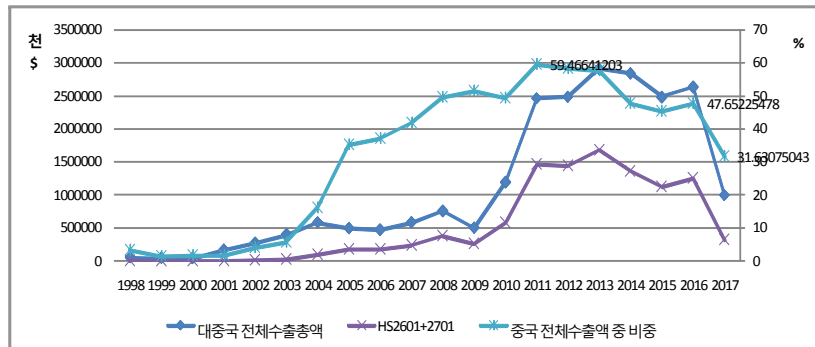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대중수출의 성장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주로 광물 자원의 수출확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광물자원은 2000년에 1%미만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19.4%에서 2005년 41.5%로 급증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60%를 초과해 대중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이러한 추세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그림2〉와 같이 북한 지하자원의 수출은 무연탄과 철광석 두 가지 품목에 집중되어 왔다. 즉 무연탄의 대중수출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9.1%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47.7%까지 급증했으며

〈그림 1〉 북·중 무역총액 및 무역수지



출처: kita.net에서 필자 작성.
주: 2017년은 1월-7월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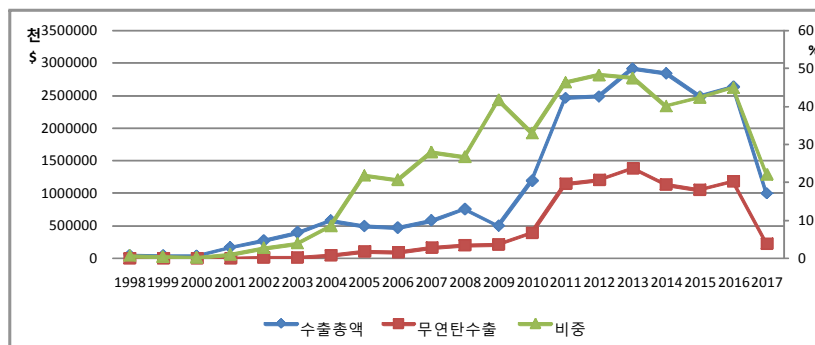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대중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광물의 비중



출처: kita.net에서 필자 작성.
주: 2017년은 1월-7월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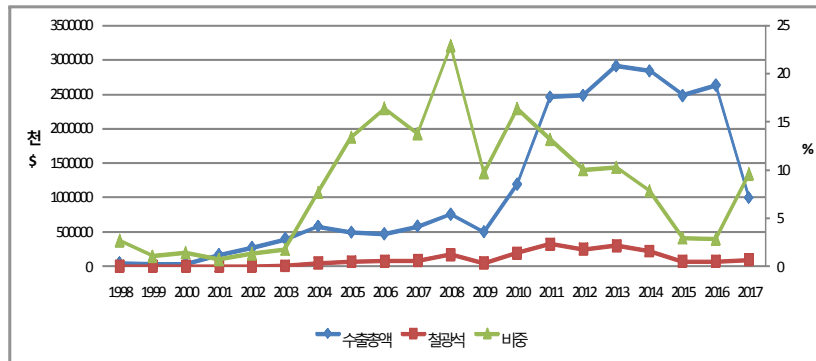
2016년에는 45%대를 유지해 왔다(그림3참조). UN제재의 목표 대상이 왜 무연탄에 집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철광석은 2002년 1.7%에 불과했으나 2003년 이후 10%를 넘어 2008년 한때 25%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3년까지는 10%대를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3〉 북한의 대중무역수출총액에서 무연탄의 비중



출처: kita.net에서 필자 작성.

〈그림 4〉 북한의 대중무역수출총액에서 철광석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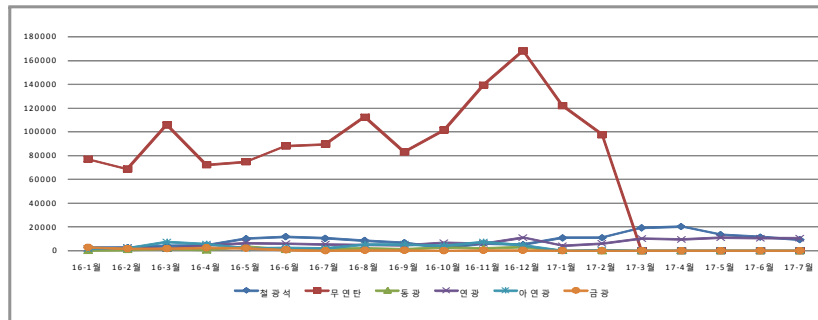


출처: kita.net에서 필자 작성.

그러나 유엔이 2016년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석탄수출상한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석탄수출상한제'는 2015년도의 석탄수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북한의 석탄수출량을 38%로 제한함으로써 석탄수출이 연간 750만 톤 또는 4억 달러를 초과 못하도록 규정한 조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UN은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2371호에서는 아예 석탄수출의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봉쇄하였다.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의 허점이 되었던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의 무연탄 대중수출비중을 보면 급격히 하락했다. 〈그림3〉과 같이 대중수출에서 무연탄의 비중은 2016년 44.8%에서 2017년 약 22%로 100%이상 극감했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대중 무연탄수출액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림6〉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이후 중국은 북한의 무연탄을 아예 한 톤 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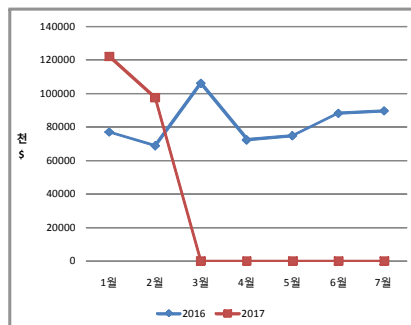
〈그림 5〉 북한의 대중광물수출



출처: kita.net에서 필자 작성.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연탄, 금광, 아연광 등 수출금지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수록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림7〉과 〈그림8〉에서 철광석과 연정광의 수출이 증가한 시기는 무연탄의 수출이 감소한 시기와 대략 일치했다. 특히 철광석은 2015년과 2016년 대중수출에서의 비중이 약 3%까지 하락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시 약 10%의 비중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6〉 월별 무연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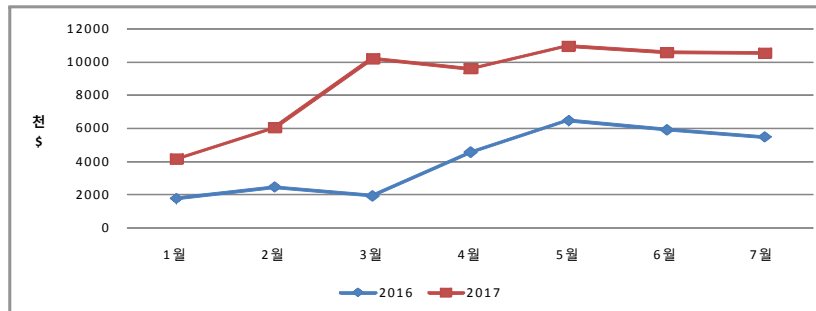


〈그림 7〉 월별 철광석 수출액



출처: kita.net에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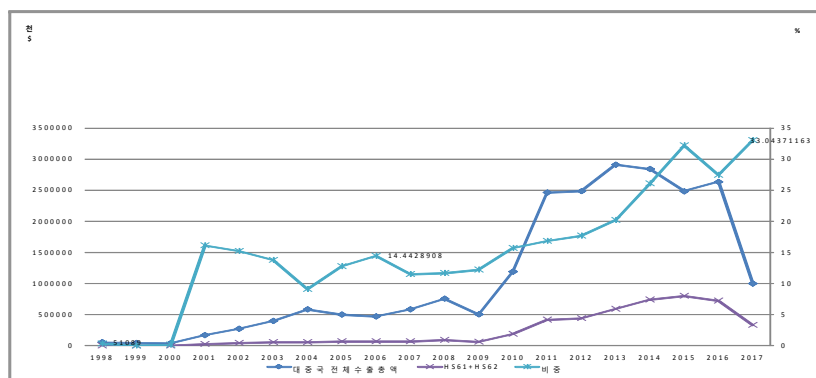
〈그림 8〉 월별 연 정광 수출액



출처: kita.net에서 필자 작성.

그러나 무엇보다 제재기간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품목은 섬유 제품이다.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섬유제품의 비중은 〈그림9〉와 같이 2008년 11%의 궤도에 올랐으며 꾸준히 성장하여 2015년 30%를 넘어섰다. 2017년 상반기에는 33%를 차지하여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1위로 부상하였다.

〈그림 9〉 북한의 대중섬유제품 수출액 추이



출처: kita.net에서 필자 작성.

주: 섬유제품은 HS61과 HS62를 합한 금액임.

즉 북·중 무역에는 풍선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과 같이 어떤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 다른 부문이 그 부족량을 메우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17년 7월 북한의 두 차례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8월 5일에 채택된 8번째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안이 채택되었다. 즉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 광물전문 수출을 금지하였다. 여기에 석탄의 수출상한선도 아예 없앴다. 뿐만 아니라 해산물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송출 동결 등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풍계리에서 실시하였다. 이는 제재에 대하여 북한도 역시 조급증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핵과 ICBM급 발사체를 완성할 때까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안보리 제재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촉진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결의안 초안에 담았던 대북 원유 송출 중단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2017년 9.12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중·러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타협한 ‘협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북 결의안이 외교 교과서처럼 대국 사이의 이익을 대변하며 채택되고 있다. 이는 결의안의 2371호 채택을 하고 불과 1달 만에 또 다시 역사상 최강의 제재인 제재안을 채택한 것이지만 미국이 초안에 대하여 중·러의 수정안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북한 문제를 둘러싼 중·러의 힘을 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몇 가지 중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

해볼 필요가 있다.²⁾ 첫째, 중국은 북한 사람들, 심지어 북한 대사관계와
 까지 모두 동결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노려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계자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말까지 북측 기관들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북한기관에 대한 면밀한 금융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 북한 실험 이후 중국
 지식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제
 6차 실험 이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드배치와
 북핵문제를 중국 입장에서 대등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
 된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핵관련 연구소인 원자력 총국산하 무역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국은 핵과미사일저지를 위한 제재와 동시에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민생경제의 발전과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국은 저인망 그물식 포괄적 제재를 선호
 하고 있고, 중국은 외과수술식 정밀 제재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식 제재는 민생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Ⅲ. 북·중 무역의 동인³⁾

사실 북·중 무역은 ‘민간무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역이 동북3성 바깥 말하면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 인터뷰 조사

3) Ⅲ 장은 주로 정은이·박종철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무역 관행과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14 하반기(제26권 2호, 통권 제62호)
 에 의해 작성

게다가 역사도 매우 길며, 국경을 사이에 둔 압록강과 두만강의 길이는 매우 길다. 두 번째, 무역의 주체와 행태를 보았을 때 물론 국가기관인 무역회사도 있지만, 그 기원을 보면 북한화교나 중국조선족, 중국에 연고를 둔 북한주민 등 연고자 중심의 보따리무역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세 번째 북·중 무역은 그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위안화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접경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통신·정보망 및 결제망, 도로·유통망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즉, 인프라를 상호 공유·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무역을 증대시키는 동력이 된다. 특히 북·중 무역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성장 발전하였다.

1. 민간 육로무역: ‘연고자(緣故者)’와 보따리무역

(1) 친척방문과 보따리장사

개혁개방 이후, 중국 또는 북한과의 연고는 연고자들로 하여금 양국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보따리장사를 시작하게 하는 자연스런 동인이 되었다. 당시 친척방문을 통해 보따리장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선족 A-1씨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나는 국경연선(沿線)에 살아서 연길에 자주 놀러갔다. 내가 처음 조선에 가게 된 동기는 친척방문이었다. 여기서 친척방문이란 여권이 아닌 ‘국경통행증’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연선에 거주하는 호구(戶口, 호적)를 가진 주민에게만 1달러짜리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속해 준다. 바뀌 말하면 국경연선에서 100km 벗어난 호구를 가진 주민(戶口民)은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제도다. 그러나 말이 친척 방문이지 다들 장사하러 간다. 나도 1989년 북한에 간 이유도 장사였다. 조선에는 수산물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개방을 하지 않아 주민수요에 비해 경공업제품은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에는 주민을 위해 생산되는 물건이 없다. 반면에 중국은 경공업이 발달해 있어서, 신발, 양말, 바지, 의류 등 복장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이를 북한에 가져가면 잘 팔렸다. 그래서 나는 중국에서 공업품을 몇 십 지함(상자)으로 가져가 팔았는데, 2-3 일이면 다 팔렸다. 여기서 번 돈은 중국에 가져가도 쓰지 못하니 중국에서 필요한 물자를 샀다. 조선에는 수산물이 흔하며 중국에도 당시 마른 오징어 등 수산물을 먹기 시작해 수요가 높았다. 그래서 나는 ‘아 이걸 가지고 오면 되겠다.’하고 가져와 팔았다. 지금은 마른 명태가 1마리당 10위엔(인민폐)이지만 내가 처음 조선에 갔을 때는 그 누구도 먹지 않아 중국 돈 2전원, 3전원이면 샀다. 해삼, 전복, 마른 오징어 등 돈이 되는 것은 다 사가지고 왔다. 잣, 들깨 등 농토산물 외에도 심지어 모피까지 가져왔다. 중국에 가져오면 다 팔린다.”

즉, 중국·북한연고자의 북한, 중국방문은 단순한 친척방문이 아니었다. 조사자 중에도 중국한족과 한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 또는 중국 친척집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친척집을 다시 방문한 사유 또한 장사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북한화교는 중국과 연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에 비해 비교적 통행의 자유로움이 있어 오래전부터 중국을 왕래하여 북·중 간 보따리무역을 해 왔으며, 조선족보다 그 역사가 길다. 이 중에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에 건너와 중국인으로 사는 화교도 많지만 이들은 여전히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들과의 연계를 끊지 않고 이들과 협력 하에 보따리무역을 지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조사되었다. 특히 단둥과 국경을 접한 신의주는 본래 화교가 많이 거주했다. 즉 1935년에 신의주의 인구는 5만4310명으로서 도(都) 인구총수의 4.6%를 차지했으며, 민족별 구성을 보면 조선인이 71.7%, 일본인이 15.3%, 중국인을 기본으로 하는 외국인이 13%를 차지했다(교육도서출판사 편, 1989: 446).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신의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 상품의 유통이 가능한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신의주화교는 북한무역회사가 본격적으로 무역을 시작한 1990년대 말까지 북한에서 장사하기에 다른 지역의 화교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한편, 중국조선족은 중국에서 직접 상품을 날라다 신의주를 비롯한 무산, 회령, 혜산 등 접경지대 시장에서 직접 장사를 했다(정은이^a, 2012: 137-141).

(2) 보따리무역에서 밀무역으로

연고자들은 1978년만 해도 북한에서 이른바 ‘편리화(便利鞋)’라는 천 신발 남자용, 여자용을 지함(종이로 된 큰 상자)에 넣어 중국에 가져가 팔았다(D-5). 그 이유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북한경공업 제품의 질이 중국보다 나왔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인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컬러TV, 녹음기, 자전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연고자들은 북한에서 제일 조선인 귀국자를 통해 사들인 일본중고가전제품을 가져다 중국암시장에 팔아 10배 이상의 이윤을 얻었다. 중국에 TV한 대만 가지고 들어와도 적어도 중국 돈 2, 3천원의 이윤을 획득 하였다(D-3). 뿐만 아니라

일본 엔도 중국에 가져가 암달리 환전상에 팔았다. 북한에서 화교가 중국에 200만 엔을 가져가다 걸린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당시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었다(D-12). 이러한 행태는 일본제품의 북한유입이 가능한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⁴⁾ 1987년 전후부터는 중국인의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북한화교를 중심으로 북한 금이 유입되었다(D-8). 한편, 연고자가 중국에서 가져간 상품은 초기에는 사탕, 과자, 빵이었으며 특히 산동인은 밀가루, 만도우(包子)를 좋아해 국수 등 밀가루 가공류를 가져와 팔았다(D-9).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쏘론, 아스피린, 우황청심환 등 약품을 가져다 팔아, 화교 집은 약국과 같은 기능을 했다. 1987년부터는 옷, 신발, 구두를 들여갔는데, 그 이유는 중국선양(沈陽)에 ‘우아이(五愛)’시장이라는 복장 도매시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당시 동북삼성(东北三省)의 복장도매시장의 중심지로 화교들 또한 단동에 오면 이곳에서 옷을 도매해 단동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해 들여갔다.

이러한 물품들은 초기에는 등짐 형태로 운반되었으나 그 후 물량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구루마나 달구지로 운반했다. 이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세관은 통과하지만 친척방문의 명목으로 짐을 운반하므로 면세 대상이었다. 북중 다리(桥头), 철도와 같은 육로공식무역 루트를 이용한 일종의 ‘무관세 보따리무역’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는 보따리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달구지뿐 아니라, 대형트럭으로 운반하는 무역주체가 등장했다. 이들은 원활한 물품의 교역을

4) 그러나 사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북한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상품은 신의주를 통하는 경우가 많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의주는 화교들의 거주 기피대상이었다. 신의주보다는 남포, 순천, 평성, 원산, 해주 등 큰 도시를 통해 상품이 들어왔으며 이곳은 특히 일본에서 온 귀국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화교와 귀국자간 물자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위해 북한세관원에게 술, 담배 등 약간의 뇌물을 받치면서 이러한 행위가 하나의 관행과 같이 되었다. 다음 조선족 A-7씨는 ‘장사’가 ‘무역’의 성격으로 변모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친척방문으로 조선에 갔어도 중국에 다시 올 때는 가져가는 짐의 한도가 있다. 예를 들면 해삼, 전복 등 건어물은 1kg이상 조선에서 가지고 못 나온다. 그래서 나는 해산물 1백kg을 샀다면 99kg는 밀수로 넘겨온다. 즉 검사하는 세관원에게 돈을 찢러 주고 눈 감아 달라고 부탁한다. 이것을 중국에 가져가면 5천 달러 버는데 그 중 500불을 뇌물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도 먹을 것이 있으니 눈 감아 준다. 그러나 밀수하는 사람이 많아 검사하는 사람도 많다. 물건검사, 세관, 위생검역 등 부류가 많아 보통 3, 4명이 같이 와서 검사한다. 그러면 나는 매 사람마다 돈을 찢러 준다. 후에는 이게 아예 관행처럼 되어버려 세관원이 오히려 나를 톡 보고는 ‘얼마 주겠는가?’부터 묻는다. 그렇게 돈으로 모든 게 가능해지자 친척 방문 장사에서 무역으로 크게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쌀 10톤을 트럭으로 가져가면 (북한)세관 넘어갈 때 1포대씩 먹으라고 선물주면 통과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무역이 되었다. 사실 정상무역을 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을 하자면 국가에 다 받치고 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80%는 다 밀수로 넘긴다.”

또한 운반하는 상품의 품목도 변화했다. 즉 1980년대 중반에는 주로 생필품 등 경공업제품보다는 명태·해삼 등 농수산품을 중국에 가져갔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개·동물가죽·골동품·그림·금 등 품목으로 점차 확대되었고, 동시에 무역의 참여자도 증가했다. 이러한 품목은 리스크(Risk)가 큰 반면 한번만 성공해도 목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상품은 부피도 작아 운반이 용이했다. 따라서 종전의 부피가 큰 중국산 공업품을 북한에 운반하여 판매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주머니에 달리만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거래품목이 해산물, 옷 등 단가가 낮고 부피가 큰 상품에서 부피가 작으면서도 단가가 높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거래금지 품목도 함께 증가하면서 친척방문의 보따리 무역은 일정부분 무역 또는 밀수의 성격도 짙어갔다.

2. 공해상에서의 밀무역: 한족과 조선족

(1) 수산물 밀무역과 한족 무역상의 부상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북·중 소규모 민간무역은 북한과 내륙국경을 사이에 두고 북한화교·조선족 등 북한연고자가 중심이 되어 국경지역 주민상호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소액거래를 해왔다.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북·중 민간무역은 1990년대 중후반 들어 강·바다 등 수로를 통한 밀무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특히 북한과 육지 외에도 강·바다가 함께 접해있어 수상운송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단둥지역에서 부상되었다. 즉, 단둥은 연강(沿江), 연해(沿海), 연륙(沿陆)이라는 3연(三沿)의 개방도시로 대동항과 랑투항 2개의 항이 있다(丹東市地方志辦公室 편, 2012: 236). 조선족 A-2씨는 1998년 처음 단둥에 와서 목격한 수산물밀무역현장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1993년, 94년부터 해상 무역장이 생겼다. 단둥에는 처음 1997년 회사 일로 직원을 데리고 왔는데, 여관을 잡아놓고 있었다. 심심해서 밤에

바다구경을 가니 조그마한 목선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서로 배를 가져다 붙이고 굉장했다. 북한말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북한사람인가?’ 물으니 조선족이라 했다. 여기서 뭐 하는지 물으니 ‘뻔모’한다고 했다. 뻔모가 뭐냐 물으니 중국말로 ‘뻔옌마오(边贸)’ 즉 ‘변방무역(边境贸易, 국경무역)’을 줄여 ‘뻔모(边贸)’라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으니 중국하고 북한하고 민간지간에 간단하게 하는 무역이라고 알려줬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물으니 답변해 준 사람이 중국교포인데 옌벤에서 왔다고 했다. 자신들은 그저 월급 받고 일하는 통역인데 나도 하고 싶으면 한 군데 소개시켜 줄 테니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오라 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한족사장을 하나 소개시켜줬다. 한족 사장은 나에게 배를 타고 같이 바다에 나가자 했다. 배는 조그만 배인데 2시간쯤 타고 나가니 평북도 ‘수원도’라는 무역장이 나왔다. 거기서 일단 배를 붙이니 조선인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 꽃게를 3톤 가져 오겠 다하면, 우리는 톤당 3천 달러로 가격을 합의하고 살아있는 게를 가져 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 조선 배들은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어떤 통로 에서 기다리라고 알려준다. 그 사람들도 다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240 통로 하면 240통로에 가서 기다리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경비병에 붙들려 벌금을 내야한다. 그 깜깜한 밤에도 동경 몇 도 하면 하나 틀림없이 딱 가져다 붙인다.”

한편, 중국조선족 면담자 대부분 헤이룽장(黑龍江), 옌벤자치주 등 내륙출신으로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북한과 주로 육로 보따리무역에 종사했으나, 1990년대 말 단둥으로 이주·정착했다. 이들이 단둥에 전혀 연고가 없음에도 이주한 까닭은 단둥이 다른 북중접경지역에 비해 교통이 편리해 북한과 무역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처음 단둥에

와서 종사하게 된 대북무역은 공해상 밀무역으로 조사되었다.

“내가 연고가 아닌 단동에 온 이유는 단동이 중국 땅에서 해관이 가장 크다. 그리고 조선무역은 다 평양하고 신의주로 직통이 되고, 북한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동맥이다. 엔벤은 못 산다. 나진 선봉에도 가 보았지만 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단동에 오게 되었다. 그 전에도 북한수산물물 하면서 단동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조선 무역하기를 결심한 이상 단동에 와야 한다. 그때가 2001년도다. 특히 따렌은 조선 무역을 무조건 배로 해야 하지만 단동은 육로도 있고, 강도 있어 편리하며 물가도 훨씬 저렴했다.”(A-4).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동에 이주해 온 중국 조선족은 대체로 한족에게 통역의 형태로 고용되어 북중무역에 종사했다. 이는 한족이 조선족과 달리 단동출신이 대부분이어서 단동사정에 밝을 뿐 아니라 수산물분야에서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바꿔 말하면 단동에서 대북무역은 중국한족이 우위에 있다. 1990년대 말 단동에 처음 와서 한족에게 통역으로 고용되어 수상밀무역에 종사하게 된 조선족 A-1씨 또한 당시 자신의 수산업분야에 대한 지식의 미약함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내륙이라 소라, 까막조개 등 수산물에 대해 하나도 몰랐다. 나 보고 통역을 하라 하는데 일상용어는 할 수 있지만 수산물은 북한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북한말로 바지락은 알지만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 수첩을 꺼내들어 한족사장에게 물으니 ‘짜시에’라고 알려줬다. 또 북한말로 모르는 것은 북한사람에게 물으니 ‘바스래기’라고 알려주었다. 조선말로 소라라 하는데 중국어로는 또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니

중국인이 ‘하이루’라고 알려줬다. 그러면 또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렇게 해서 1달 동안 바다에 다니면서 배우면서 통역을 했다. 원래 직장에서는 300위엔 이상 받았는데 수상무역통역으로 1,000위엔 을 받았다. 반년 하다 한족사장에게 월급을 올려 달라 해서 2,000위엔을 받고 일했다.”

(2) 리스크와 투자의 증가

중국한족은 예를 들어 단둥 변방부대와 연고가 있어 수상밀무역에 종사하는데 유리했으며, 특히 공해상 수산물 밀무역은 보따리무역에 비해 이윤이 큰 만큼 무역규모가 크다. 다음 C-9씨의 사례와 같이 우선 선박을 구입하고 같이 일할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론펜(大連)에서 군복무 할 때 알던 후배가 한족인데 단둥 변방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뒤를 봐 주겠으니 동강에 와서 조선과 수산물무역을 한번 해 보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인민폐로 17만 위엔을 가지고 동강(大東港)에 왔다. 당시 17만 위엔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그 돈으로 우선 180마력짜리 배를 샀는데 인민폐로 6만 위엔 들었다. 이 배를 가지고 배꾼 5명을 고용해 바다로 나갔다. 동강에 가면 다 조선바다지 중국바다는 없다. 조선으로 나가는 길은 밀수길이 라고 따로 있었다. 내가 나간 쪽은 연빙산이라는 조그마한 섬인데 매일 물때를 따라 나간다. 한번 다녀오면 20-30톤 씩 수산물을 싣고 왔다.” 동시에 여전히 물물교환이 많지만 규모가 보따리무역에 비해 커진 만큼 수산물에 대해 지불해야할 대가 또한 커져 일정자금이 필요하다. “북한 바다에 가는데 비자도 필요 없고 돈 거래도 없었다. 거의 물물교환

형태로 이루어졌다. 당시 북한은 식량조차 힘든 시기였고 우리도 힘든 시기여서 수산물도 싼 값에 중국에 들어와 싼 값에 팔렸다. 이따금 옥수수, 쌀 이런 것을 싣고 가서 옥수수 1톤에 700달러라고 하면 그 금액으로 조개 1톤에 얼마하고 바뀌었다. 그런데 하루는 80마력짜리 목선으로 밀가루 16톤을 싣고 나갔는데 바닷물이 다 나가고 없어 배가 걸리는 곳에 그냥 세워두었다. 그랬더니 배가 점차 기울면서 싣고 간 밀가루포대가 1포대 2포대 진흙탕 갯벌에 떨어졌다. 그런데 16톤이나 되는 밀가루가 하룻밤사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수원도는 섬이어서 조개 캐러 온 아주머니가 600-700명은 되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조개 캐러 나오면서 1포대, 2포대씩 들고 나간 것이다. 나랑 친한 최 보위 지도원이 이걸 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하고 한탄했다.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뒤져보니 조그마한 굴에 2포대, 3포대 이렇게 숨겨 놓았다. 결국 절반만 찾고 돌아왔다.”(A-2)

게다가 이는 엄연한 밀수여서 중국경비병을 통과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한 쪽 바다에서 북한 변방경비병에게 잡히면 배를 압수당하므로 압수당할 때마다 배를 되찾아오기 위해 배 값에 상응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북한경비병에게 가져다주어야 했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비할 자금이 있어야만 지속할 수 있다.

“3년 동안 북한과 수산물밀수를 하면서 내 돈 17만 위안을 다 까먹었다. 조선 경비병에 붙잡힐 때마다 벌금을 내야한다. 한번 붙잡히면 배를 압수당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중국 배를 타고 다시 와서는 내 배를 돌려받기 위해 조선 경비병들이 요구하는 물건들을 내 배 값만큼 사가지고 간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사무용품에서 열쇠 등 요구하는 것이 많다. 물론 친구가 변방부대에 있어 중국에서 조선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조선에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때가 문제다.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내가 조선에서 바꾼 소라, 꽃게 등 수산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조선 변방부대가 압수해 간다. 바다에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배들이 나와 있다. 그런 곳에서는 누가 죽어도 찾지 못한다. 바다에는 북한 경비대가 54(오사), 52(오이), 62(육이) 3개 밖에 없다. 딱 3개밖에 없는데, 경비대가 항상 순환한다. 물론 매일 밀수해도 항상 잡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에 한번 붙잡혔으면 다음번에는 안 붙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붙든다. 그렇게 해야 나도 먹고 살지 매일 붙잡으면 사람 죽는다(C-8).”

이와 같이 수산물 밀무역은 혈연중심의 보따리무역에 비해 참여의 폭도 커지고 이윤도 큰 만큼 참여자도 증가했으나, 이윤이 큰 만큼 일정 투자가 필요하며 리스크도 또한 커져, 리스크에 대비할 능력을 갖춘 주체가 주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 자본을 구비한 중국한족이 새로운 대북무역의 행위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3. 한족의 대북투자 발전추세: 무역에서 투자로

(1) 파트너십의 형성과 투자: 외화벌이 생산기지

북중무역은 주로 중국이 광물·수산물·농토산물 등 1차 산품을 수입하고, 원유·식량 및 각종 생필품 등을 수출하는 구조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은 북한의 ‘원료생산기지’라 불릴 만큼 원자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추세이다.

그런데 현지조사결과, 북·중무역은 이러한 양적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병진하여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하나가 종전에는 북·중 쌍방이 상품만을 수출입하는 '단순무역'관계였다면, 무역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기업 간 파트너관계가 구축되면서 합영·합작의 방식으로 투자·생산하는 형태가 증가했다. 예를 들어 광산개발업자 C-3씨는 초기에는 광석만을 직수입했으나, 현재는 북한대방의 광산기지에 굴착기, 채굴기 등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 설비를 보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보낸 기계 설비를 작동·지도·관리할 중국인 기술자도 함께 파견하여 장기체류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측 파트너가 원자재 및 자본재를 북한 측 파트너가 운영하는 생산기지에 투입하면, 북한 측 파트너는 이를 바탕으로 원료를 가공·완성하여 최종생산재를 일정계약 지분에 따라 중국 측 파트너에 다시 수출하고 중국 측 파트너가 투자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진행되었다. 조사에서도 대북사업가 대부분 초기에는 광물, 수산물, 농수산물 등을 북한에서 단순 수입했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대방의 생산기지에 직접 투자하여 완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들여오는 형태로 전환한 기업이 증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국 기업 간 투자가 국가 대 기업이 아닌 기업 대 기업이라는 비교적 친밀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북한 무역회사는 하부단위에 수산물이면 수산물, 광산이면 광산, 복장이면 복장 등 생산이 가능한 생산기지(외화벌이생산기지)를 국내 각 지역에 확보하고 있는데(정은이, 2012b;6-10), 중국 측 파트너는 서류상 계약은 북한무역회사의 상부단위와 하지만 실무는 하부생산기지와 직접 한다. 예를 들어 중국 C회사는 수산물은 북한 K무역회사 소속의 원산수산물 기지, 복장이면 북한 D무역회사의 신의주 복장가공생산기지, 탄광이면 순천탄광기지 등 하부생산단위 지도원과 직접 호흡을 맞추어 가며

일을 한다. 다음 대북수산업 무역업자 W씨 또한 북한 무역회사의 하부 생산단위가 생산에 직접 필요한 원자재(자본재 포함)를 들여보내 기지를 가동시키고 그 대가로 여기서 생산한 물건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형태를 취한다.

“중국에서 갈 때는 중국인 직원을 한명만 데리고 간다. 북한에 1달 머물면 경비가 인민폐로 만 위엔 정도 필요하다. 그 대신 10만 위엔, 15만 위엔, 20만 위엔의 수익을 올리니 부담이 없다. 우리가 원산의 무역대방의 수산물기지로 굳이 직접 가는 이유는 신선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산물의 경우, 상품이 죽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니 우리가 밀지게 된다. 보통 북한에 가면 1달씩 머무는데 수산물기지의 직원들 에게 예를 들어 문어라면 문어를 바다에 나가 돈을 주고 거둬오게 한다. 큰 문어는 30kg가 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주사기로 물을 먹인 것이다. 이런 것을 중국에 가져오면 수지가 맞지 않아 우리가 직접 북한바다에 나가 앉아 검사하고 문어를 받아 차곡차곡 차에 싣는다. 이것을 싣고 와서는 우리 소속기지의 작업장 아가씨들에게 건넨다. 작업반장에게는 작업을 잘 해달라고 상점에 가서 과자, 사탕, 빵, 음료 수도 사다놓고 먹여가면서 가공하라고 요청한다. 문어는 보기 좋은 모양으로 해서 냉동실에 냉동시킨 후 아이스박스에 넣는다. 이런 시설은 중국에서 준비해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수산물기지에 (필자: 대규모) 냉동고를 하나 지어준 것이다. 간단하게 저장실은 100톤급, 냉동실은 20톤 내지 40톤 규모로 건설해 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가공을 잘 한다.”(A-2) 즉 수산물의 경우도 종전에는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현장에서 북한 배가 잡은 수산물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식량 등으로 수산물 값을 결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1년에 얼마하고 쌍방

무역파트너가 투자계약을 하면 계약에 따라 북한 무역파트너가 직접 중국으로 수산물을 가져오거나 중국에서 직접 북한의 생산기지로 가서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동강시의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꽃게 철은 8월에서 10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인데 이 기간 동안 북한에서 매일같이 10~15톤 이상의 꽃게를 공급받아 가공공장 노동자들이 3~4일 밤을 꼬박 셀 정도로 양이 많다. 이 중국회사가 7년간 안정적으로 북한수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 측 파트너가 확보한 수산물기지에 배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가솔린, 그물, 실, 냉동시설 및 기지 직원의 식량 등을 꾸준히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중국대북투자회사의 1년간 이윤은 얼마나 안정적인 생산기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 회사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러한 북한수산물기지를 최소 10개 정도는 확보하고 장기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무역통계상 수출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대중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중국의 무상원조도 아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대체로 '외화'가 아닌 '자본재'에 대한 투자로 일종의 유상대여에 가깝다. 왜냐하면 북한 측 파트너는 중국에서 보내온 원료·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현지의 광산(토지, 자원), 노동력, 전기 등을 활용해 광석을 생산하면, 양측의 계약관계에 의해 완성품을 지분에 따라 중국으로 보낸다. 이는 통계상 중국의 대북수입이 된다. 즉 북한 측 파트너는 중국 측 파트너의 투자에 의해 회사를 운영하고 여기서 얻은 이윤으로 투자금(자본재)을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투자측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자본재 회수도 가능하다.

“중국은 북한과 교역할 때 운송문제가 걸려 선박을 많이 사서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다. 즉 배를 빌려준 것이나 같다. 중국과 북한사람이 중국에 합작해운회사를 설립하고 배 소유주는 중국으로 등록하고 경영만 북한 측이 하게 한다. 그러면 설사 경영이 잘못되어 이윤(선박 값)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해도 배 소유주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 투자한 돈이 날라 가는 법은 없다. 배를 북한에 준 것이 아니어서 경영이 악화되면 배만 환수하면 된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사업은 대방만 잘 만나면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해도 재산도 보호받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C-5)

즉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북사업은 어떤 무역파트너를 접촉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는 설비투자에 머물지 않고 외화벌이 기지에서 일하는 북한 내부 노동자의 관리까지도 포함한다. D시(市)의 K수산물 가공회사에 근무하는 조선족 A-3씨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설 등 명절에는 다음과 같이 직원에 대한 서비스도 추가로 무상지원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K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주하는 직원을 파견한다.

“우리 수산물가공공장회사의 사장은 한족인데 원산의 A무역회사 수산물기지를 꼭 잡고 있다. 우리 회사는 A무역회사에 185마력짜리 배도 빌려 주고, 디젤유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지 직원들에게 한 사람당 5달러씩 월급도 주고 작업복도 제공했다. 때로는 쌀, 기름, 채소도 주고 돼지도 잡아준다. 또 그 기지사람들이 따로 요구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명절에는 직원들에게 옷도 제공한다. 원산기지는 여자 직원이 많다. 그래서 올 추석에는 한 벌에 인민폐 400위엔하는 속옷도 직원 140명 모두에게 1인당 2벌씩 보냈다. 월병도 2톤 나갔다.

1상자에 9병 들어있는 맥주도 50상자 나가고, 1상장에 6병 들어있는 바이지우(白酒)도 30상자 나갔다. 모두 합해 인민폐로 약 16만 위엔 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물론 이 물자가 기지직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서 한족 직원도 1명 보냈다. 그 직원은 원산 수산물기지에 상주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보낸 속옷을 기지 직원들에게 나누어줬는지 검사하기 위해 출근하는 직원들의 속옷을 들춰본다. 월급도 5달러씩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장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북한 측과 계약을 했다.” 이는 역으로 북한무역회사의 생산기지 가동률, 이윤이 중국투자가를 얼마나 많이 유치했느냐에 따라 결정됨을 뒷받침한다.

“경공업품, 생필품은 없다. 평양 시내를 제외하고 도무역이나 이런 곳은 내가 듣기로 거의 닭 공장, 계란 공장, 양계장이다. 이 사람들에게 공장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거다. 우리처럼 자동차 만들고 하는 개념이 아직까지도 없다. 중국이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큰일 난다. 북한은 지금 아예 중국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공산품, 생활필수품의 경우, 간단하게 머리 핀 만드는 프레스라든가 그런 기계 자체도 다 들어간다. 기계설비도 보면 별걸 다 사가지고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노트 한 개도 종이 질이 나쁘니까 깨끗한 것이 없다. 종이 질은 한국이 참 좋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계속 한국 것 밖에 않쓴다. 북한은 알사탕 사먹는 시대라고 할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F씨)

조사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단동에 상주하는 북한무역대표부의 역할은 가격을 포함한 상품정보수집, 무역계약서작성, 자금결제 등 본사와 중국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좋은 대방(對方, 중국회사 무역상대)을 발굴하여 본국(소속기관)과

연결시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단둥에서 북한 H무역 대표부를 지낸 탈북자 F씨는 북한 무역회사로부터 하루에도 중국기업 투자유치요구를 적지 않게 받았다. 따라서 북한무역대표부는 처음에 중국 무역파트너에게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상품에 대한 가격·품질 등을 문의하는 ‘요구서’를 보내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공장의 생산 지표, 건물·공장의 생산능력, 최종 생산물 및 이에 대한 생산설비를 요구하는 ‘생산합작 제안서’를 보내면서 이곳에 투자할 파트너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 5.24조치 이후, 한국무역상의 몰락과 한족의 대북한 무역과 투자의 장악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북투자의 주체가 대부분 중국 한족이라는 점이다. 단둥거주 조선족, 북한화교의 경우 상당한 인원은 무역을 목적으로 단둥에 건너온 이주민으로 단둥이 고향이 아니다. 이들은 단둥에서 대북무역을 개척한 선도자라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라오닝성 및 단둥출신의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자본력이 빈약해서, 주로 북한과의 언어 및 문화적 동질성을 이용해 남한과 북한, 때로는 한족과 북한 간 무역을 중개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단둥에서의 한국인 또한 1990년대 후반 남북관계가 활성화된 시기와 맞물려 북한산 상품이 무관세로 한국에 반입될 수 있는 제도적 특혜를 활용해 대북사업에서 우위를 점했었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이후 제도적 특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져 한국인의 북중무역에서 역할이 소멸되었다고 할 정도로 인원도 투자규모도 극감했다. 오히려 한국인이 개척한 북중무역과 남북 무역의 자리를 점차 한족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단둥주재 한국인 대북사업가 B-2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직원이 북한에 들어가 있었다. 직원이라기 보다 파트너 개념의 조선족이 4명 들어가 있다. 조선족은 북한에서 통화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직교역할 때 조선족을 많이 고용해 북한에 파견했다. 이들은 남포에서 작업해 직접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어졌다. 북한과 직교역할 때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었으니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산 물건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부수적으로 관세 20%에, 중국에이전트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결국 판매가가 35% 이상 쏠린다. 그게 전부다 중국 사람들에게 35% 마진을 더 준 셈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직교역으로 수산물을 받을 때는 2천불에 받을 수 있던 것이 지금은 5천 달러에 받아야 한다. 가격이 100% 이상이 올랐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그 만큼 중국 사람들이 이윤(마진)을 많이 챙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이 중국 애들(한족)과 합작을 많이 한다. 조선족은 자본력이 약하다보니 중국애들이 자본을 투자한다. 지금은 조선족이 중국한족의 거대 자본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조선족에게 북한에 들어가 작업하라고 5천만 위엔, 1억 위엔은 줘도 10억 위엔, 20억 위엔은 못 준다. 그러나 한족은 50만 달러, 100만 달러 줘서 이만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같이 조금 투자해 이만큼 가지고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다.”

그러므로 대북무역에서 한국인 무역상을 위하여 중계자 역할을 했던

중국조선족 및 화교는 5.24조치이후 그 대상을 한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조사되었다. 즉 조선족 화교 30명 중 25명이 한국인에게 고용되어 대북무역에 종사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15명이 한족으로 대상을 전향했다. 즉 5.24조치로 대북무역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한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외화벌이기지에 대한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

한편 대북사업관련 정보 또한 구조적으로 다음 B-1씨의 증언에서와 같이 중국한족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뒷받침한다.

“내가 대북무역을 하다 보니 북한에 투자하려는 한족들이 나를 많이 찾아온다. 와서는 북한의 군부나 당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여기 중국 쪽에 수풍댐이 있고 그 맞은편에 삭주군(신의주 근교)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삭주군에 가면 일제시절부터 인(금속:P)을 추출했던 광산이 하나 있었다. 당시에는 인만 추출하고는 광산을 버려두었다. 그 폐광에 지금 철이 약 2억 톤 정도가 쌓여있다고 한다. 광산의 철 함량은 약 25%되는데 그것을 선별기에 두 번 돌리면 철 함량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철광석이 비싸져, 과거에 채굴하지 않았던 광석을 다시 선별해 채굴해도 이윤이 충분히 남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 쪽 투자자가 이곳에 260만 달러정도 자금을 투자하러 평양에 가 광업성의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군부에서 반대해 못하고 있다. 특히 삭주군에는 주요 무기 공장이 있어 외국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정보를

평양에 주었더니 북한 애들도 놀랄 정도였다. 그게 2009년도 초였다.”

그러므로 한쪽은 대북사업의 새로운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최근 한쪽의 북한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부각된다. 특히 조사에서 홍콩, 장시성(江西), 장쑤성(江蘇), 상하이(上海), 타이완 등 중국의 남방자본이 북한에 투자된 사례가 주목되었는데 무엇보다 평양에서는 건설이 한창인데 여기서 건설은 아파트·주택을 짓는다는 의미로 평양 중심부의 새로 지은 아파트 한 채가 7, 8년 전만해도 3-4만 달러에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평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평균 10만 달러 전후로 상승했을 정도로 북한에서도 부동산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⁵⁾ 이와 더불어 북한에서는 중국과 같이 주택과 아파트가 완공되면, 실내장식을 하지 않고 골조만을 판매한다. 따라서 주택구매자가 싱크대를 비롯해 벽지, 문, 가구 등 모든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은 집값에 맞먹는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투자가는 현재 주택건설과 맞물려 대북투자항목으로 (한국산) 싱크대, 벽지와 가구공장 투자를 적극 추천하였다. 더욱이 개인이 기관명의를 빌려 집을 지은 후 투자금은 집을 판 후에 환수하는데 예를 들어 1층에 5, 6세대만 들어서도 20층짜리 아파트면 총 120세대를 지어 팔 수 있다. 이때 120세대 다 팔지 않고 명의를 빌린 단위에 20채 정도만 준다 해도 100세대에 5만 달러씩만 팔아도 500만 달러의 판매액이 나온다. 조사결과, 중국의 대북투자가는 북한의 부동산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외국인이 단독으로

5) 북한에서 주택매매가격은 2000년 들어 급상승했다. 평양에서 몇 천 달러에 거래되던 아파트 한 채가 만 달러로 진입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화폐개혁이후 잠시 주춤하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10만 달러로 급등했다(필자의 단동현지조사, 2013년 9월, 2014년 8월).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없으나 다음 대북사업가 C-2씨의 증언과 같이 시도는 엿보이기 시작했다.

“원래 회사가 3층짜리 시 무역관련 건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헐고 주변 주민지역 땅을 보태어 5동을 지을 계획을 수립했다. 5동을 건설하자니, 자금이 모자라 2동을 외자 유치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외자 유치계획은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는 계약이다. 만일 이것이 허가가 난다면 주택관련해서 외국인 투자는 최초가 된다. 평수는 150m², 180m², 200m²짜리를 지을 예정인데 위치가 중구역이라 개인이 10만 정도만 투자하면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아는 친구여서 나보고 5만 달러만 내면 분양해 주겠다고 했다. 돈 있으면 그걸 사 놓았다 다 지으면 팔라고 했다. 공산품을 떼어서 열심히 파는 것보다 투자 받아 집값이 오를 때 팔면 더 돈이 되기 때문이다.”(C-2)

따라서 중국인이 북한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은 북한 연고자의 경우, 북한 친척명의를 빌려 아파트 몇 채를 구입해 놓는 사례도 조사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단독이 아닌 북한무역회사와 합영·합작의 형태로 일단 공장이나 상점 부지의 장기사용권을 확보하여 땅을 점유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현재 평양에서 장사가 잘되는 항목 중 하나가 자동차 관련 부품상점인데, 이는 북한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관련 부품이 잘 팔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는 도색을 해야 하고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가야 하므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중국인의 대북투자로는 식당이나 백화점도 많은데 이러한 사업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국의 대북무역업자가 북한무역회사와 건물이나 공장, 상점 등 땅을 합동으로 계약해서 만평이나 2만평을 사 놓고,

그것을 10년이면 10년,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계약해 팔지 않고 놓아두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투자 목적은 땅을 선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부지는 넓게, 자금은 적게 드는 사업항목으로 할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싱크대나 가구 공장만 해도 몇 가지 자재와 기술자 몇 명만 들어가게 하고 북한에서 창고, 공장, 상점 등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면 장기간 계약을 해 놓고 자유롭게 왕래한다. 물론 부동산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이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중국인이 향후를 내다 보고 북한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평양의 땅은 A, B, C등급으로 나누어 1평에 50달러, 60달러, 80달러면 살 수 있다(필자 역: 사용권). 따라서 좋은 부지를 점유하고 싶으면 일단 북한무역회사와 사업을 잘 해 합영·합작으로 해서 북한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어느 땅에 건물이나 상점을 짓고 까또도 판매하고 조립한다는, 혹은 공장을 지어 북한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하여 임가공을 한다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를 멋지게 써서 일단 그 땅의 사용권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놓는다. 그 후 승인받은 땅에 담장을 쌓는다든지 건물을 대충 지어 놓는다. 그리고는 넓은 부지 한쪽에 중국에서 까또도(필자 역: 중장비) 많이도 필요 없다. 몇 대 들여다 팔면 된다. 이 한 두 대가 다 팔리면 또 중국에 와서 한 두 대 들여가면 된다. 물론 이것만 팔아도 밀리지 않는다. 한 대 팔면 한 대 이윤이 나오고, 금방 1년, 2년이 지나간다. 그러다 규제가 풀리면 50년 계약해 놓았으면 10년이 흐른 뒤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지어 팔면 된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도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다 개혁개방의 기미가 보이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지어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면 주택

보다 이윤이 더 낫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토지를 선점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자동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분간 용역을 공장경영을 하면서 이윤을 내고, 그 계약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방을 하면 즉 공장부지에 건물을 짓고 상점을 차리고 경영을 하면, 부동산 이용권에 대한 담보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인 대북투자자가 투자하는 항목이 주로 광석, 수산물, 농산물, 토산품인데 이러한 1차 산품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광석의 경우, 광산에 최소 2백만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어 광산투자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대상 중의 하나이다. 특히 윈저우(温州), 쑤저우(苏州) 등 남방의 한족투자가 부각되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게 조사되었다. 수산물의 경우도 광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이윤이 적다. 따라서 현재 한족 대북 투자자들이 전망 있는 투자항목으로 부동산 투자를 거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무산광산, 도로, 철도, (라진선봉)항만, 공단 등 대규모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2013년 11월 필자와 중국기업인(吉林企業集團)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북한에 소규모로 투자하는 기업과 달리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는 역사가 대략 10여년이 넘고, 성정부계열이나 방산관련 대기업이 많았다. 예를 들어 무산광산 등 대부분 지속적 인프라 투자는 대규모 적자를 동반하지만, 성 및 국가에서 적자의 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IV. 결 론

최근 UN 안보리는 대북제재의 결의안의 범위를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군수물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항목에서 점차 수산물·해외 노동력과 견·임가공 등 민생부문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바꿔 말하면 UN은 평화적 해결과 함께 핵과 미사일의 저지를 위한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민생경제 발전과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저인망 그물식 포괄적 제재를 선호한다면 중국은 외과 수술식 정밀 제재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90%이상인 현재 중국을 압박하면 제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 북·중 무역은 ‘민간무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역이 중국의 동북3성 즉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무역의 역사도 매우 길며 국경선의 길이도 길다. 뿐만 아니라 무역의 주체나 행태를 보아도 국가기관인 무역회사도 존재하지만 그 기원을 살펴보면 북한화교나 중국조선족, 중국에 연고를 둔 북한주민 등 연고자 중심의 보따리무역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북·중 무역은 그 지역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화룡시의 공무원 월급은 무산광산의 광물을 수입하는 천지기업에서 적지 않은 부문이 충당되고 있다. 즉 지방세수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위안화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북·중 접경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북·중 간 통신·정보망 및 결제망, 도로·유통망

등 인프라망이 공유·형성되어 가고 있다. 즉 북한에는 통신망을 깔지 않았지만 정보와 전화가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들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중 무역을 증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제재의 한계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도서출판사 편. 1989. 『조선지리지전서: 함경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김석진. 2013. “북중경협 확대 요인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KDI북한경제리뷰』 2013년 1월호
- 김중호. 2012.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정책시사점.” 『수은북한경제』 (서울: 수출입은행, 2012 여름호).
- 남성욱. 2006.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18권 1호.
- 박종철. 2012.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7집 제1호.
- 박종철·정은이. 2014. “국경도시 단동과 북한 사이의 교류와 인프라 현황에 관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
- 양문수. 2006.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문제 소고.” 『북한경제논총』 제12호, 서울: 북한경제포럼.

- 양운철·하상섭. 2012. “UN의 대북한정책의 한계.” 『통일정책연구』 21권 2호.
- 이 석. 2008. “북한무역에 대한 쟁점 분석: 북중, 북일, 남북교역.”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서울: KDI.
- _____. 2010.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서울: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
- 이 석 · 이재호 · 김석진 · 최수영. 2010.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서울:KDI.
- 이승엽. 2012. “북한화교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영훈. 2011.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경제.
- 임수호 · 최명해. 2010. “북·중 경제밀착의 배경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10월.
- 정은이. 2012a. “동포경제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접경 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 논총』 제 17호 1호.
- _____. 2012b. “북한무역회사의 구조에 관한 연구: 북중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과제 논문.
- 정은이·박종철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무역 관행과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 연구』 2014 하반기(제26권 2호, 통권 제62호).
- 정형곤 · 방호경. 2009.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서울: 동북아연구시리즈 09-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홍익표. 2010. “북중 경제협력과 창지투 개발계획, 동향과 분석.” 『북한 경제리뷰』, 9월.
- 丹东市地方志办公室编. 2012. 『丹东手册』, 丹东: 丹东市地方志办公室出版.
- 叶剑主编. 1996. 『中国口岸通览』, 北京: 经济管理出版社.
- 張治国. 1994. 『最新中国地名事典』, 东京: 日外アソシエーツ.
- 于国政. 2005. 『中国边境贸易地里』, 北京: 中国商务出版社.
- 张秀萍编. 2011. 『边境贸易物流』, 北京: 中央民族大学出版社.
- 中国海关总署临管司 편. 1997. 『中国海关通关指南』, 北京: 中国对外经济贸易出版社.
- 丹东市地方志办公室 편. 2012. 『丹东年鉴』, 沈阳: 沈阳出版社.
- 辽宁年鉴编辑委员会 编. 「辽宁年鉴」, 中国统计出版社. 각 년도판.
- 辽宁省统计局 编. 「辽宁省统计年鉴」, 中国統計出版社. 각 년도판.
- 丹东市地方志办公室 编. 「丹東年鑑」, 中国社会出版社. 간 년도판.